민주 '검수완박' 전략 고심…국힘엔 맞불 정의엔 회유

야권 반발에 단독처리 강행 의지
4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혼란 예상
김오수 이어 한동훈까지 저지 가세
지방선거 앞두고 정국 긴장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국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172석을 가진 거대 정당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야권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 처리'까지 혼란도 예상된다.

야권의 반발 뿐만 아니라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까지 법안 저지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장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아 관련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를 강행,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앞서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기 삼아 시간끌기식 입법 저지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맞불 전략으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다.

무제한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는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강경파 초선인 황운하 의원도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회기를 짧게 끊어서 회기를 종료한 뒤 다시 갱신하고 또 종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자체를 아예 무력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근책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 공동 추진 제안을 검토 중이다.

당 안팎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당론 추진키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심지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5년간 일자리 127만개 늘어…국민이 함께 거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현 정부 5년간 12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통계 지표와 관련해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이룬 실적이고, 우리 국민이 함께 거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조 수정을 예고한 가운데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글을 통해 '5년간의 노력이 쌓여 최근 고용률(계절조정)이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통계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1000명이 늘어, 같은 달 기준으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공천 사실상 확정…비대위 추인만 남아

광주시장 컷오프 오늘 발표

6·1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록〈사진〉 전남지사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13일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과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면접을 한 김 지사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지사와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이들의 공천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인만 남은 상태다.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김 지사는 본선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와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과 경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었던 만큼 경선을 치르지 않는 김 지사로서는 본선을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비례 국회의원에 이어 불모지였던 호남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저력이 만만치 않아 두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12일 후보자 면접을 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준호 변호사,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 등 광주시장 후보군에 대한 컷오프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장 후보군에서 1~2명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2차 인선도 안철수 '팽'

安, 배제된 인선에 '尹회동' 패싱
공동정부론 파탄 수순 밟나 촉각

13일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이 발표돼 사실상 조각이 마무리됐지만, '공동정부'를 공언했던 '친(親)안철수 그룹은 인선에서 빠져 있다.

비록 18개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두 개 부처 인선이 남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추천 인사가 1기 내각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대선 전 단일화 당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이 사실상 파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수위 인선뿐 아니라 1기 내각 인선 역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1·2차 내각 인선만 놓고 보면, 단일화 때 "종이 쪼가리(조각·합의문 은유) 말고 날 믿어달라"던 윤 당선인의 약속 역시 허언에 그치게 됐다는 불만이 안 위원장측에서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까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총 16개 부처의 장관을 지명했다.

안 위원장 측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고산·유웅환 인수위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등은 1·2차 인선 발표에서 제외됐다.

단일화 협상의 주역이자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의 경우 당초 행안부 장관 등 물망에 오르내렸으나, 이날 인선에서 최종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입각 의사는 전혀 없다"며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마저 사퇴한 상태다. 특히 안 위원장 측은 과학기술·보건·복지 등 분야에 대한 인선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분야 인선은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인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 '코로나19 극복', '연금개혁' 등과도 연계됐다는 점에서 공동정부 구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이날은 '2차 인선에서도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됐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윤 당선인이 참석하는 도시락 만찬이 예정돼 있었지만 만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인사 발표 전인 오전 10시께부터 약 30분간 윤 당선인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브리핑을 불과 4시간 앞둔 이 자리에서도 윤 당선인은 2차 인선 명단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인수위는 이날 이 의원이 사퇴한 인수위원직 빈자리에 당선인 비서실 정무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을 지체 없이 투입했다. 이 의원의 후임 인사임에도 안 위원장 측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